

# 기후변화 대응과 민관협력사업(PPP): 미국 USAID의 GDA를 중심으로

손 혁 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 목 차

- I. 들어가며: 기후변화대응과 녹색ODA
- II. 녹색ODA와 민관협력
- III. USAID의 민관협력(PPP)
- IV. 기후변화 관련 PPP 주요 사례
- V. 나가며

## I. 들어가며: 기후변화대응과 녹색ODA<sup>1)</sup>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7년 유엔총회에서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전망〉에서 사용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 지구환경질서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85개국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들이 참여하여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1)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녹색ODA의 보편적 개념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본문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에 근거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로 쓰이며 그 범위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물 관리, 환경보전, 산림관리 등 에너지 환경 분야 전반을 포함한다. 또한 때때로 그린 ODA, 환경 ODA와 동일 개념으로 쓰이며, 본 원고에서는 녹색ODA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일명 리우회의)를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양립’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 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리우선언,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의 중요한 국제협약들이 채택되었다.

특별히,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은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하여 UN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왔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국의 지구온난화 배출가스 저감, 개도국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 및 자금 지원장치 마련 등으로,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의 3대 운영 매커니즘을 가진다. 1995년 베를린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된 이후,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문화 한(38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목표 설정)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이후,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새로운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는데, 이는 열대우림의 개간을 줄이는 개도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후변화대응 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기술 이전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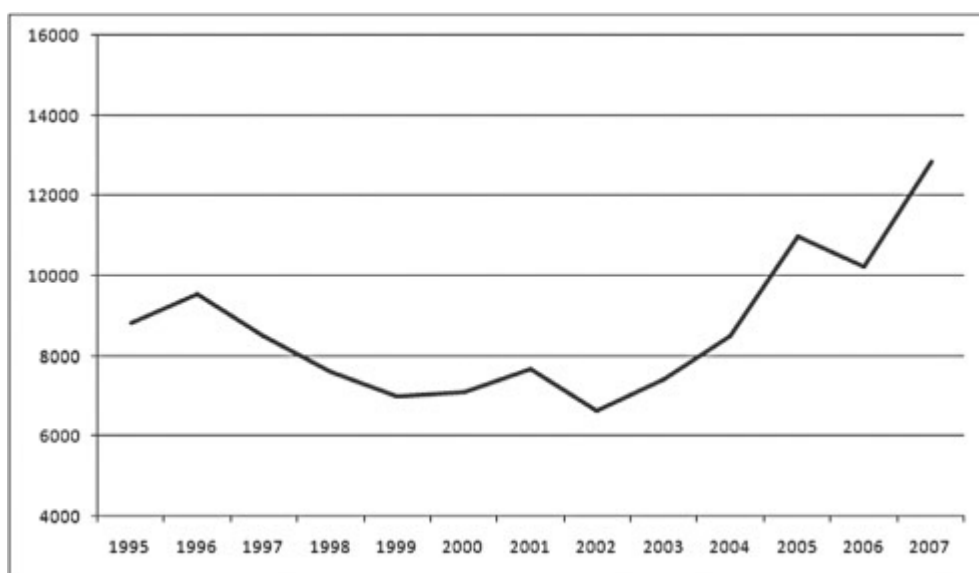
결국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기온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고 선진국은 2010년 1월 말까지,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코펜하겐 협정’이 채택되었다. 비록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구속력 있는 구체적 감축 합의안이 도출되지는 못했지만 지구사회의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협의와 조정을 모색하였던 의미있는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09년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의 결과물인 코펜하겐 협정에서는 ‘코펜하겐 녹색 기후기금(Copenhagen Green Climate Fund)’을 창설해 2020년에 연간 지원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제3세계 적응 원조를 결정하였다.<sup>2)</sup>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을 발표하였고, 저탄소사회의 구축을 위한 ‘녹색성장선언문’을 채택하여 녹색성장

2) [http://www.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15&wr\\_id=30&page=2](http://www.enerpol.net/epbrd/bbs/board.php?bo_table=bbs15&wr_id=30&page=2) 2012년 2월 25일 검색

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ECD의 녹색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은 신성장 프레임워크, 산업구조조정, 고용, 사회적 형평성의 네 분야를 정책우선순위로 선정하여 R&D, ICT, 기술이전 등의 혁신적 조치와 함께 시장, 조세 정책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녹색ODA는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활발해져왔는데 기후변화대응 ODA를 포함한 환경ODA는 아래 <그림 1>에서 볼수 있듯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위상과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OECD DAC은 2006년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의 통합을 위한 선언’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포함할 것을 규정하기도 했다.

〈그림 1〉 DAC 회원국의 환경원조액 추이(1995~2007, 백만 달러)



자료 출처: OECD/DAC 통계 사이트(CRS online)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과거 주로 UN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던 것에서 최근에는 세계은행과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의 국제개발협력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특히 ‘개발과 기후변화에 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on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를 구성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사업기회 발굴을 도모하고 있다. 프레임워크는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이외에도 시장기반의 재원조달 메커니즘 촉진, 민간부문 자원 활용, 신기술 개발 및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sup>3)</sup>

3) 권율, 『국제사회의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현황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2.

EU의 녹색ODA 개발전략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파트너 국가들의 사막화와 산림파괴 방지를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림자원과 같은 천연자원의 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EU는 2009년 4월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 (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 법령을 채택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지침, EU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지침 개정안, 회원국별 EU ETS(Emissions Trading Scheme) 제외 부문의 감축부담방안 제안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Triple 20’이라는 정책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 20% 제고, 온실가스배출량 20%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sup>4)</sup>

주요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은 저탄소 사회 구축,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 ‘녹색ODA’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08년 12월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이 통과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를 향상하여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감축 및 2020년까지 최소 26% 감축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영국의 국내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일본 또한 2050년까지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Cool Earth Partnership을 제안하여 2007년 5월 ‘Cool Earth 50’과 2008년 후쿠다 비전 ‘을 저탄소 사회구축을 위해 선포하였다. Cool Earth Partnership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매커니즘으로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적응, 청정에너지 이용, 감축 대책 등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하는 개도국에 지원하는 매커니즘이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물 관리, 환경보전, 산림관리 등의 녹색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대개도국 원조로 정의되는 ‘녹색ODA’가 주목을 받고 있고<sup>5)</sup> 해외원조단체나 일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인프라 지원,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통한 에너지 전환 등의 환경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4) 권율, 『국제사회의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현황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3.

5) 한바란,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사례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3.

서 녹색ODA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녹색ODA를 민감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개도국이 기후변화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환경을 개선·보존하여 선진국에도 직접적인 이익을 안겨 줄 수 있는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에 따른 원조의 녹색화 경향은 한국에서도 녹색 ODA가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국내정부는 2008년 미래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녹색성장을 기초로 정책담론이 재구성되고 상황이다.

## II. 녹색ODA와 민관협력(PPP)

국제사회는 경제 및 사회 부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부문을 하나의 섹터로만 접근할 경우 간과될 수 있는 문제가 많고 타 분야의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큰 포괄적인 틀 안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환경을 크로스커팅 이슈로 간주하고 ‘환경’이라는 이슈를 모든 개발 사업에 통합하도록 권고되어 왔으며, 이를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라 지칭한다.<sup>6)</sup>

이러한 “환경주류화” 이슈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의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 행위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게끔 이끌어왔다. 선진공여국들은 개도국의 막대한 기후변화 대응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 조성 및 규모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으며 그 중 2002년 UN 몬테레이 회의에서 혁신적 개발재원 (Financing for Development)의 논의를 통해 MDGs, 빈곤감소, 사회적 조건개선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보호 등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개발재원을 보충하고자 다양한 금융메커니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몬테레이 회의는 민간자금 유입의 증대, 선진국의 재정부담 증가, 냉전종식 이후 원조동기의

---

6) 박명지, 『한국 무상 ODA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연구: 정부·공공기관 외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협력단, 2011). p.23.

약화 등으로 인한 ODA 규모 감소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총 23페이지 분량의 몬테레이 컨센서스는 ODA 이외에 개발재원의 다양한 출처와 자원 마련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sup>7)</sup>,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의 내용을 보면 ① 개발을 위한 국내재정자원동원, ② 개발을 위한 국제재정자원 동원(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민간자본), ③ 개발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국제 무역, ④ 국제재정·기술협력 증진, ⑤ 대외부채탕감, ⑥ 국제금융·재정·무역시스템의 일관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sup>8)</sup> 이 중 특히 민간재원의 빈곤감소 기여를 강조하였고 민간협력(PPP)은 민간의 개발협력 참여를 위한 주요 방법론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선진공여국들은 막대한 기후변화 비용을 공공재원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공재원이 개도국 내 기후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취약국의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sup>9)</sup>

국제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 민관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1990년대를 지나며 기존 국가중심의 원조 방식에서 생긴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파리선언, 아크라선언, 부산회의에서는 국제적인 합의와 원칙에 따라 개발에서의 좀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원조를 실시해 나가고자 하는 목소리와 방향이 제시되었다. 특히 부산선언의 32조를 보면 민간부문과 개발(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sup>10)</sup>에서 혁신, 부, 소득, 일자리 창출, 국내 자원의 활용에 있어 민간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세부적으로는 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 정책 및 전략을 기획하고 구현하는 과정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② 공동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민간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③ 민관부문 및 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개발과 사업성과를 동시에 증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개발협력사업의 파트너형태의 변화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는 개발 협력 사업이 정부, 자선기구, 국제기구, NGO과 같은 단독 공여기관과 수원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가 1:1 단독으로 사

7) 정지원 외 1인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24.

8) <http://www.un.org/esa/ffd/monterrey/MonterreyConsensus.pdf> 2012년 2월 25일 검색

9) 정지원,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 조성: 논의 동향 및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3.

10) [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images/stories/hlf4/OUTCOME\\_DOCUMENT\\_-\\_FINAL\\_EN.pdf](http://www.aideffectiveness.org/busanhlf4/images/stories/hlf4/OUTCOME_DOCUMENT_-_FINAL_EN.pdf)

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DAC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제 개발원조 사회는 공여국 중심의 단기적, 소규모, 단독 프로젝트의 분절화로 수원국의 개발결과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자적 사업보다는 다양한 협력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효율적<sup>11)</sup>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민관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이 가지는 재정적인 제약을 민간이 보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인식되며 민관파트너십이 새로운 주체, 대안적 원조방식, 원조와 다른 개발 수단의 통합이라는 면에서 현재 개발협력 논의의 흐름과 부합하며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민간의 역할 변화와 정부 단독의 원조에 대한 비효율성의 대안으로써 원조를 민관파트너십의 틀에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sup>12)</sup> 막대한 기후변화대응 비용을 민간재원을 통해 보완하는 측면으로 민관파트너십(PPP)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PPP는 정부 주도하에 민간영역의 참여자들, 특히 기업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달성하기 위해 연대체를 형성하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위험과 책임 그리고 자원뿐만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를 함께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이는 각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순수한 의미의 인프라에 관한 민관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개발영역에서의 PPP사업에까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로 개발영역에서 이를 개발공공재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경우, 유상원조는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원조의 경우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자선적 기금의 유입을 통한 사업수행을 뜻한다.

선진공여국의 PPP 추진 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독일의 독일개발협력부(BMZ)는 민간영역이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MDGs 등의 개발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들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행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BMZ는 민간영역의 참여를 기업의

---

11) 권율,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환경변화와 민간 부문의 역할』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대외 경제 전문가 풀 토의자료, 2006).

12) 최명렬 외 3인 『신 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對중남아시아 직업교육훈련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p.25.

13) Peter Utting and Ann Zammit, Beyond Pragmatism Appraising UN-Business Partnerships.(Geneva :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2006), p 1.

CSR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sup>14)</sup> 기술협력을 담당하는 GIZ는 개발정책 책정 및 현장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내 개발관련기관, 재단, 교회, 국내 및 국제 NGO 등의 다양한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민간 부문의 협력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60개국의 국가에서 약 300개의 PPP 프로젝트를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영국의 DFID는 무상원조를 통해 민간부문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환경적 문제, 장기간의 어려움, 환율리스크, 인적 자원의 투자환경을 정비하며<sup>15)</sup> 민간협력 파트너는 개도국과 무역 투자, 수출입을 하는 자국기업을 비롯하여 수원국의 기업, 상공회의소 외 그 밖의 여러 산업기관 등을 포함한다.<sup>16)</sup> DFID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간주하여 빈곤감축의 목표와 더불어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도 중요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나아가 상호간의 파트너십은 DFID 뿐만이 아닌 민간 기업에도 상업적 이익을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USAID의 글로벌개발 연대(GDA)를 통해 공공민간 파트너십 원조를 구현하며 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NGO, 기업, 국제기구 교육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기본방침으로 삼아왔다. 다음 장에는 미국 USAID의 기후변화 대응 민간협력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논하기로 하겠다.

14) "We should therefore make greater use of private-sector engagement to achieve these objectives, focusing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MZ,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volving Private Sector. (Berlin: BMZ, 2011). p.4.

15) 최민경,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 PPP와 개발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한국국제협력단, 2008), p.60.

16) DFID, Business Partnership Unit- Partnerships with Business.(London: DFID, 1997), p. 5.



### III. USAID의 민관협력(PPP)

미국은 제도화 된 틀에서 민간협력과 공적개발원조를 잘 융합하여 기업의 이익과 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PPP를 운영하며 녹색ODA와 관련, 1991년 USAID는 프로그램 선정 시 지구온난화문제를 포괄하는 환경이슈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서를 발간하고, 기후 변화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기후변화관리프로그램( Global Climate Change Programe, GCC)을 마련했다. 환경과도 밀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기에 녹색ODA와 민관협력분야를 분석함에 있어 미국의 PPP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USAID의 PPP 개념

USAID에서 PPP란 민간 기업이나 , NGO, 재단과의 일대일 협력 또는 그 이상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USAID는 국제개발원조에 민간부문의 ODA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관협력연대(PPA, Public- Private Alliance)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이 PPA 개념을 바탕으로 2001년 5월 Colin Powell 국무부 장관에 의해 발표되고 2002년 1월부터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협력사업인 글로벌개발 연대(GDA, Global Development Alliance)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당시 Powell장관은 GDA 프로그램을 공적-민간부분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대외원조 활동의 영향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USAID의 21세기형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 2. 글로벌개발 연대(GDA, Global Development Alliance)

이전까지 USAID의 개발협력이 일방적인 원조 자금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2001년 이후 GDA를 통해서만 민간기업, NGO, 대학, 연구기관, 재단 등과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USAID는 민간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주체들과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통해 전문성, 자원, 창조적 역량을 대외원조와 연계시켜 개발과제를 명확히 하며 과제해결을 위해 자금과 인적 자원, 지식 정보 제공, 리스크를 분담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림 2〉 GDA의 개념- 비즈니스와 개발의 접점



출처: <http://idea.usaid.gov/gp/about-gp>

GDA 비즈니스 모델은 통상 USAID와 민간기업 1개 이상, NGO 1개 단체 이상의 3자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가장 높은 제도화 수준을 유지하며 기업의 이익과 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PPP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GDA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에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미국의 대외원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자금의 80%가 NGO와 대학, 각종사회기금재단, 종교단체, 자선단체, 이주자와 같은 민간자금으로부터 나온다. 즉 20%만이 정부의 공적 ODA자금이고 80%가 민간자금이기 때문에 공공민간협력을 통한 새로운 모델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개발성고를 기대할 수 있다.<sup>17)</sup> USAID는 독립적인 GDA 부서를 설치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은 특정기업의 이익추구를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직접적 사업이익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며 USAID를 통한 GDA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 무형의 기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USAID는 개발우선순위와 비즈니스의 접점을 찾아 사업을 수행 하고 있으며 정부재원에 기업, 비정부기구, 시민사회의 자금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다양한 경제성장, 수원국 민간부문 강화, 보건 및 환경, 교육, 기술이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17) 이태주, 『시민사회와 선진국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국제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다중적 민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 (한국국제협력단 포럼 발표자료, 2006), p. 12.

이러한 PPP는 미국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제기구 또는 해당지역의 민간기업, 재단 또는 단체와 협력하며<sup>18)</sup> 환경ODA사업 관련 총 4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해 매년 약 1억 9천 5백만 달러의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약정해 왔다. 이 민관협력연대의 파트너는 USAID의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물자제공, 경영과 관련된 기술지원, 제품 또는 상품개발, 프로젝트 설계, 지적 자본 제공,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USAID의 전문성과 지식,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술적 조언을 제공받는다.<sup>19)</sup>

USAID의 주된 역할은 ① GDA Incentive Fund라 불리는 자금의 제공 ② 파트너후보의 평가 ③ 지원할 프로그램 결정 ④ 프로젝트 실시자의 보고 및 조사를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으로 정의된다. GDA 사무국은 PPA사업 중 무상자금협력(grant)이나 인센티브펀드(incentive fund)의 제공, 전문가파견 등의 기술지원, PPA사업의 기획 및 민관매칭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GDA내의 민관 연합형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인센티브 펀드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또한 USAID는 적극적 연합관계 형성을 위해 직접적인 파트너와의 협력 뿐 아니라 국제사업리더 포럼의 개최 등 각 파트너들의 성장도모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USAID는 미국의 ODA에 민간을 포함시킴으로 원조효율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개발협력에 대한 민간참가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금의 개발협력 투입증대를 꾀하려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0)</sup>

### 3. 현황

이렇듯 USAID는 잘 갖춰진 된 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ODA를 융합하여 가장 높은 제도화 수준을 유지하며 단순히 사회적 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이익과 개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PPP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04년도 이래 약 290개의 연대(alliance)가 형성되었고(USAID 약 11억 달러, 파트너의 기여는 37억 달러 이상), 339개사·89개 단체가 참가해오고 있다.<sup>21)</sup>

18) <http://idea.usaid.gov/organization/gp/overview> 2012년 2월 15일 검색

19) <http://www.kiep.go.kr/skin.jsp?mode=viewjoin&grp=koje&bid=Pool0205&num=181312> 2012년 2월 15일 검색

20) 최민경, “국제개발원조와 PPP” 『국제개발협력』 2008년 제1호 p.63.

21) 최민경, 『국제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선진공여국의 PPP사례와 한국형 Mode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연구회 발표자료, 2008), p.19

〈표 3〉 GDA의 수혜지역, 파트너 및 프로젝트의 기간

지역	비중	파트너 수	비중	기간	비중
아프리카	26.9%	1	28%	1~3년	70%
아시아	11.9%	2~5	42%	4~6년	20%
유럽	4.9%	5~9	14%	7년 이상	3%
중남미	13.6%	100이상	11%	알수없음	7%
기타	42.4%	알수없음	6%		

출처: USAID, Evaluating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 Analysis of USAID'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USAID, 2007).

전체 GDA 프로젝트의 70%가 1~3년의 단기 사업이고 GDA 프로젝트의 42% 2~5개의 파트너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역은 아프리카(26.9%), 중남미(13.6%), 아시아(11.9%)를 차지하고 지원 분야는 농업, 민주주의, 경제성장 및 무역, 교육, 긴급구호, 보건, 소액 대출 및 소규모 자영업, 위생수,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sup>22)</sup>

〈표 4〉 GDA 지원분야

지원 분야	비중
경제성장과 무역	26%
보건	13%
환경	13%
농업	13%
교육 및 훈련	10%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8%
HIV/AIDS	4%
기타(IT, 인도주의지원, 에너지 등)	13%

출처: USAID, Evaluating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 Analysis of USAID'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USAID, 2007).

22) USAID, Evaluating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 Analysis of USAID'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USAID, 2007).

분야별 비중은 경제성장과 무역, 보건, 환경, 농업 순으로 두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성장, 무역의 경우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현지의 수출 역량을 목적으로 PPP를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지원 방식은 기업이 필요사업을 제안하면 평가 후 지원하는 방식과 기존의 GDA에 새로운 파트너가 추가되는 방식을 운영해 오고 있다.

USAID에서 진행되는 개발원조 사업의 절반은 NGO 개념과 비슷한 민간자원조직(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PVO)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이런 국내·외의 특정 비영리단체인 PVO를 대상으로 업무계약 및 무상협력자금 지원, 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USAID는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금이나 협약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 NGO들과는 긴급구호, 민주주의, 조류독감, 교육 등의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며, 이 관계는 프로그램 실행의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지속된다. 이처럼 미국 개발협력 분야는 그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간의 파트너십 강화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NGO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23)

## IV. 기후변화 관련 PPP 주요 사례

USAID는 GDA를 통해 생물다양성보전, 산림관리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분야와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례 또한 제시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중남미 사업이 많은 편이고 섹터별로는 농업, 보건의료, 수자원개발 등의 사례가 있다. 그 외 환경관련 생태보전, 산림, 인증제도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있다. GDA 시행 결과 개발도상국의 산업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 사업 수익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농민의 소득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했고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로 하면서 수용 가능한 시장 개척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환경 ODA에 관련된 사업은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4)

23) ODA WATCH 뉴스레터 Focus (43호) 미국 국제개발 NGO들의 축제, 인터액션(Interaction) 포럼 2010

24) USAID의 주요 사례는 GDA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각주로 표기된 문헌도 참고하였음.

<http://gda.usaid.gov/alliances/index.asp?s=SVHTWWJYVBVBXBPDSHGDMHRBQYLYTQYNT>

## 1. 서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농업분야

USAID는 소작농들의 경제 및 사회적 복지개선과 수목작물의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목작물(tree crop)지원 프로그램(STCP, The Sustainable Tree Crops Program)을 실시하였다. 이는 미 농무부와 Mars, Inc., Hershey Company, ADM Cocoa, Nestle Products, Kraft Foods 등 45개사 이상의 초콜릿생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World Cocoa Foundation (WCF), 국제열대농업연구소(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스미스소니안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며 USAID와 WCF를 비롯한 초콜릿업체들의 자금 공여는 각각 5백만 달러였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국제 초콜릿산업용 코코아빈의 품질 및 유용성개선을 위한 생물다양성 기법을 촉진시켰고 둘째, 참여 농민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었으며, 6만 명 이상의 소작농들이 농민 현장 학교 졸업하고, 약30~50%의 생산성 향상하는 결과를 이뤄냈다.<sup>25)</sup>

## 2. 탄자니아 농업, 소득증대, 수자원개발

탄자니아는 80%의 농업인구가 가계수입부족, 물 부족, 생산력향상에 필요한 기술부족으로 빈곤에 처해있는 국가이다. USAID는 KickStart사 등의 관개용 펌프(irrigation pumps)공급과 시장형성 지원을 통해 탄자니아의 농업생산력향상과 신기술도입을 지원하였다. USAID가 65만 달러를, KickStart 및 협력파트너인 SC Johnson Corporation와 Case Foundation가 81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원활한 물 공급으로 농업생산량이 증대하여, KickStart사의 펌프를 사용한 농부들의 소득은 탄자니아 GDP의 약0.2%에 달하였고, 가계소득이 향상되었다. USAID의 협력으로 팔린 3천대의 펌프로 약 240만 달러의 소득이 창출되었고 33 개의 도매업소가 설립되었으며, 126 명의 소매상인이 모집되어 훈련을 받게 되는 성과를 이뤄냈다.<sup>26)</sup>

26) 최민경, 『국제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선진공여국의 PPP사례와 한국형 Mode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연구회 발표자료, 2008), p. 23.

### 3. 중남미의 Certified Sustainable Products Alliance(CSPA)

CSPA는 USAID, Rainforest Alliance(RA), 그리고 다양한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개별 프로그램은 3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연자원과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중남미지역에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USAID가 펀딩을 (\$8.6 million), RA가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관리를 담당하며, 주요 참여 기업으로는 IKEA, Gibson Musical Instruments, Kraft Foods, Procter & Gamble, Millstone and Chiquita Brands International 등이 있다. 이들의 대략적인 자금 지원은 대략 \$70 million이며, 지역의 로컬 NGO들은 Rainforest Alliance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진행을 돕기도 한다.

USAID는 인증절차를 위한 펀딩과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참여 기업들 역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펀딩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를 통해 생산된 물품들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Supply chain에 직접 포함시킨다. 품질인증을 통해 농장운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이로 인해 품질이 크게 개선된다. 소비자들은 품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의 상품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물건을 사는데 의의가 있고 또한 전반적인 농업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무역과 투자의 기회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2008년 기준, 357,800 헥타르의 너비에 해당하는 농장과 산림이 CSPA프로그램을 통해 인증을 받았고, 생산물의 판매를 통한 총 수익은 \$437 million이며 이중 \$49 million은 사업장에 직접 투자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약 600여명의 생산자가 회계를 비롯하여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고, 34종의 상품이 개발되고 약 71,500명의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프로젝트 실행국가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과라,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있다.

### 4.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WADA(Water and Development Alliance)는 Coca Cola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연대형태로 볼 수 있는 USAID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WADA는 The Community-Watersheds Partn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Coca Cola 와 USAID, GETF (Global

Environment and Technology Foundation)의 세 파트너로 구성된다. 사업의 목표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하며 저개발국 지역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수자원과 위생에 관한 접근권 향상키고 위생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기본적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제도적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대상국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21개국으로 2011년까지 \$20.4 million이 투자 되었다. 이 협력 사업으로 2008년 기준, 255,000명의 수자원 접근권이 향상되었고 41,000명의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권이 향상되었다. 약 75,000 헥타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개선된 수자원 관리로 인하여 380,000명이 혜택을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 각 프로젝트는 굿거버넌스, 주민 참여, 생태적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평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수자원이라는 특성상 기술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실행국가는 앙골라, 볼리비아, 이집트, 엘 살바도르 등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걸쳐서 실행되었다.

## 5. 방글라데시의 농업시스템 향상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방글라데시에는 농작물 개발을 위해 2008년 USAID의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가적인 보조금도 지원되고 있는 상태이다.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농업관련 사업인 Cereal Systems Initiative for South Asia (CSISA)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네팔, 파키스탄, 인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이다. USAID와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의 기금(공동펀드)으로 운영되며 남아시아의 곡물기반의 농업시스템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좀 더 나은 쌀 품종, 농부들의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새로운 과학과 신기술을 통합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재단과 USAID의 공동펀드를 받고 타 수원국의 곡물품종 관련 연구기관이 INGO, 기업과 협력하여 운영된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2010년 오바마 정부 feed the future 라는 세계 기아, 식량 안전을 위한 남아시아 지역에 걸친 공공민간부문과 파트너를 이뤄 활동하며 새로운 작물을 개발, 활용 하고 지속 가능한 곡물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아와 영양실조 감소 및 남아시아 소작농의 소득증가를 목적으로 하며, 시골과 도시의 수백만 빈곤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다.



## 6. 방글라데시의 산림보호 및 에너지

Grameen Shakti & Nishorgo Fuel Wood Energy Reduction 사업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USAID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Grameen Shakti와 Nishorgo Support Project (NSP)가 협력하여, 방글라데시에 있는 농촌 가구와 기업들에게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07년까지 110,000개 이상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하였고, 엔지니어나 훈련분야에서 여성 인력을 활용할 계획에 있다. Grameen Shakti는 기술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뿐만 아니라 그라민은행에서 얻은 소액금융의 경험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람들에게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이 용이하게 도움을 주었다.

## V. 나가며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온 상승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자원, 농업과 식량안보, 인간건강과 거주, 생태적 재화와 서비스, 경제의 각 분야에 2차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특히나 환경적으로 낙후된 개도국에 악영향을 미치고 성장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결국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원인국가가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환경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대하여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및 조치가 필요하며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세계은행은 개도국이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이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빈곤퇴치 목적의 ODA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녹색ODA 비용은 막대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응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 조성 및 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논의 끝에 선진국은 막대한 기후변화 비용을 공공재원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기후변화대응 재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마찬가지로 녹색ODA 사업은 단일사업보다는 대부분 거대하고 장기간의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원과 장기간의 책임의 주체가 이 필요하며 이는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면서 기후변화대응 적응 및 완화 정책 전반에 대해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녹색성장으로 이어진 환경 담론을 토대로 환경을 기후변화로, 그리고 자원 및 에너지 외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을 제안하며 원조 중 녹색ODA의 비율을 2008년 15.4%에서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30%로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녹색ODA라는 명확한 정의 기준을 찾을 수 없고<sup>27)</sup> 국내 녹색ODA 역사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KOICA(윤성일 (2009), 이택근(2011))을 예로 들면 그동안의 수행된 모든 사업을 녹색ODA로 재분류(환경/산림/에너지/물/농업/기타 등 6개 부문)하여 분석해보면, 1994년 이후 KOICA에서 진행한 환경 프로젝트는 총 33개이며, 그중 90% 이상이 기후변화 관련 사업이다. 2007년 기준으로는 전체 ODA 예산 중 8.6% 정도만이 녹색ODA로 분류되었다.

현재 녹색ODA 개념에 대해 뚜렷하게 합의된 개념이 없어 추상적이며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이다. 녹색ODA 담론 관련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녹색ODA라고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녹색ODA와 PPP의 연계를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기반한 PPP사업 연계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녹색ODA 관련하여 개도국(수원국)에게 무엇을 원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의와 이에 다른 명확한 정책적 입장 제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녹색ODA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되는데, 기후변화로 모든 환경문제를 포괄할 경우 이외 환경사안을 배제함으로써 녹색ODA 범위가 축소되어 개도국(수원국)의 실질적 필요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 높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녹색ODA 사업 자체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평가의 공식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ODA의 역할을 MDGs 달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축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원칙하에 원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체계적인 USAID의 PPP 형태인 GDA를 분석하여 좋은 예를 국내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녹색ODA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이슈를 포괄하는 녹색ODA는 민관협력 정책 및 계획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 속에서 지원되어야 하며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

27) 김소연 (2009) 해외원조의 녹색화의 고찰을 통한 한국의 녹색ODA에의 정책적 제안-ODA WATCH 정책포럼 발표자료 p.25.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권율, 『국제사회의 개도국 녹색성장 지원현황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권율,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환경변화와 민간 부문의 역할』(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대외 경제 전문가 풀 토의자료, 2006)

곽재성 외3인,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모델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1).

김대환 외2인,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분야,” 『국제개발협력』 2009년 제3호, pp. 72-96.

박명지, 『한국 무상 ODA의 파트너십 제고 방안 연구: 정부·공공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한국국제협력단, 2011).

이태주, 『시민사회와 선진국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사례: 국제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다중적 민간 파트너십 구축 방안』(한국국제협력단 포럼 발표자료, 2006).

이택근, “녹색 ODA 분류 기준,” 『국제개발협력』 2011년 제3호, pp. 194-206.

윤성일, “환경 ODA와 기후변화,” ODA Watch 제18차 월례토크 2009.

정지원,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 조성: 논의 동향 및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정지원 외 1인, 『국제사회의 개발자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조광길, “KOICA의 민관파트너십 (PPP) 개발협력사업 도입방안” 『국제개발협력』 2009년 제3호

최명렬 외 3인 『신 아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對중아시아 직업교육훈련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방안(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최민경,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PPP와 개발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한국국제협력단, 2008).

최민경, 『국제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선진공여국의 PPP사례와 한국형Mode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연구회 발표자료, 2008).

최민경, “국제개발원조와 PPP” 『국제개발협력』 2008년 제1호

한바란, 『고용중심형 녹색원조의 주요사례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3.  
ODA WATCH 뉴스레터 Focus (43호) 미국 국제개발 NGO들의 축제, 인터액션(Interaction) 포럼 2010

## 2. 국외문헌

BMZ, Fo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volving Private Sector. (Berlin : BMZ, 2011).

Danid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pport Facilities in the Public Partnership Program. (Copenhagen : Danida, 2006).

DFID, Business Partnership Unit- Partnerships with Business. (London : DFID, 1997).

OEC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Paris: OECD, 2008).

UN, Working together to make a difference: a selection of partnership initiatives, (New York : UN, 2010).

USAID, Evaluating Global Development Alliances: An Analysis of USAID's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 USAID, 2007).

USAID, Fact Sheet: Office of Development Partners/Private Sector Alliances (Washington DC : USAID, 2007).

Kirkemann, Per., Marie-Louise Appelquist, Evaluation Study: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gramme. (Kirkevej : Nordic Consulting Group, 2008).

Peter Utting and Ann Zammit, Beyond Pragmatism Appraising UN-Business Partnerships.(Geneva :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2006).

Porter E. Michael, Mark R. Kramer, "Strategy and Society: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84(12):1-15.

## 3. 웹사이트

<http://www.aideffectiveness.org/>

<http://www.bmz.de/en/>

<http://www.dfid.gov.uk/>

<http://www.oecd.org/>

<http://www.usaid.gov/>

<http://www.un.org/>

<http://www.kiep.go.kr/>